

“수입 절반 난방비로...” 없는 이들 더 추운 겨울

장애인 그룹홈, 월 난방비 30만원 난방기구 사용 못해...그저 버틸 뿐 목욕탕 비용 감당 못해 결국 인상 관계당국 “가스 원재료 값 상승해”

사상 초유의 '난방비 폭등'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추위를 선사했다. 최저시급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은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직격탄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광주 광산구 '임지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은 요즘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일 방문한 장애인 자립 거주시설인 임지공동생활가정의 한낫 실내 온도는 '21도'. 평소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지만, 유독 추운 날에는 20~21도 수준으로 맞춰 놓는다.

이들이 보일러 전원을 끄게 된 사정은 몇 달 전 날아온 '폭탄 고지서'에 있다. 24평 아파트·4인 가구인 이 가정이 11월 사용한 가스 요금은 '30만1920원'. 온갖 후원금을 다 동원해도 한 달 동안 지출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 수준인 이들에게는 감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임지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이 난방비 폭등에 보일러를 끈 채 옷을 껴입고 생활하고 있다. '임지공동생활가정' 제공

당하기 버거운 금액이다.

류 원장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12월 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씻는 시간에만 잠깐 온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매일 아이들에게 ‘양말 신어라’, ‘옷 꺼 입어라’ 하며 다독였다”며 “요즘은 2명이 한 번에 같이 들어가서 씻게 하는데, ‘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식비나 프로그램 비용 등을 긴축한 상황이다. 아직 1월 가스 요금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두렵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한 노인정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노인 공공일자리로 월 57만원을 버는 박승호(72)씨는 난방비 대란에 “살기가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박씨는 “작년 이맘때 난방비가 4만원

쯤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며 “어쩔 수 없이 ‘시베리아 별판’ 같은 집에서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산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씨는 매일 오후 노인정에 들러 핑퐁 언 손발을 겨우 녹였지만, 최근 경로당도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로 유지하고 있어 추위를 피할 길이 없다. 노인정 운영비를 관리하는 이신자(80)씨는 “지원금을 늘려준다 해도 오르는 것이 더 크니 아낀 수밖에 없다”며 “노인정에 오는 노인들은 벌어도 변변치 않아 난방비가 오르는 것이 더 무섭다. 요즘 최고로 아껴 살고 있지만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제 한파의 괴로움은 비단 추위가 전부만이 아니다. 저소득층·노인 등 집에서 목욕을 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는 씻는 것마저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 1일 동구학동 한 목욕탕에서 만난 신연화(69)씨는 목욕 요금을 두고 카운터에서 연신 목욕탕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직원에게 “미리 고지도 충분히 하지 않고 짧은 사이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단골인데 참 서운

하다”고 토로했다.

신씨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겨울에 (난방비·수도 동파 등으로) 목욕탕을 자주 이용한다. 특히 이곳은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 ‘쉼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예전에는 5000원 이던 곳을 8000원 내고 다닌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버텨내기 힘든 가격이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 목욕업소 178개소의 요금은 기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추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가스를 담당하는 해양에너지가 사기업인 만큼, 비용을 할인하거나 행정적 처분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가스사와 만나 이·미용업의 공공요금을 3개월 분납하게 하는 등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남구청에 기증한 ‘동백’ 말라 비틀어진 까닭은...

“9년 전 기증 2그루 말없이 옮겨” “보도확장 탓...예산확보 옮길 것”

광주 남구가 주민이 구청에 기증한 나무를 합부로 구석에 옮겨 심고 관리까지 소홀하게 해 못매를 맞고 있다.

남구는 “보도블록 확장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기증자의 동의를 받고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년 전 아버지가 소중히 기른 동백나무 2그루를 남구에 기증했던 이모씨는 최근 동백나무 식재 터였던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근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청사 옆 골목 입구에 좌·우로 마주 보아서 풍성한 잎으로 위용을 떨쳤던 동백나무가 화단 한쪽 구석에 처박혀있었기 때문이다. 관리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쪽정

이란 남은 채로 말라비틀어져 있는 모습이였다. 나무 앞에 있던 ‘주민 기증 나무’ 팻말도 사라져 있었다.

본래 동백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자리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이름이 박힌 머릿돌과 기념식수가 번듯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기증한 아버지의 동백나무가 처참히 ‘방치’된 모습을 목격한 이씨는 곧바로 항의했다. 이씨는 “기증 당시 해당 부지는 학생들이 통학로로 자주 사용하던 길임에도 ‘폐허’와 같은 모습이었다. 남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길을 정비한다고 해 아버지가 50년 동안 기른 동백나무를 기꺼이 기증했다”면서 “(나무를 옮기려면) 최소한 기증자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관계

자는 “2015년 보도블록 확장공사 과정에서 동백나무를 왼쪽 화단 한쪽에 옮겨 심었다. 그 뒤로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다”면서 “기증자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한 상태다. 구청 공원녹지과와 논의 후 기증 취지에 맞게 더 좋은 자리에 재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증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동백나무는 관리 소홀로 말랐을 가능성이 높기에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구의 부실한 행정도 문제다. 시민이 기증한 수목과 관련하여 보호·관리 조례나 가이드라인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이) 주는 수목이니 받겠지만 (구청이) 굳이 관리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 돼 논란이 인 다.



광주 동구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옆 골목에 주민이 기증한 동백나무가 처음 식재될 당시 모습(왼쪽). 남구는 보도블록 확장공사를 이유로 기증자 동의 없이 해당 동백나무를 옮기고 관리를 소홀히 해 현재는 잎이 모두 시들어있다.

이씨의 항의 이후 남구는 “담당자와 논의 후 예산을 마련해 기증 동백나무를 적절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례로 주민들이 기증한 소중한 기

증 수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꼈다. 구차원에서 기증 대상 등을 만들어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